

文대통령 “검찰, 잘못에 책임안져”…尹 불신임 뜻 내비쳤나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 핵심”…文, 정당성 부여 집중

“공수처 설치했다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없었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야당과 검찰을 향해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공수처 출범에 최대한의 정당성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입법 독주”라고 주장하며 전선을 넓혔던 야당과, 이른바 ‘주미애·윤석열 사태’로 촉발된 일련의 검란(檢亂) 움직임 등에 대해 직격함으로써 정면 반박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제도가 완료되는 것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또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저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다”고 돌이켰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3법”인

경찰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 개정안 중 공수처법을 짚어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 이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등을 거쳐 공수처 논의가 이어져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를 반부패 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입법을 추진했다”며 “당시 공수처가 설립됐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돌이켰다.

또 2012년, 2017년 자신이 제1공약으로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을 약속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는지 모른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다”고 술회했다.

공교롭게도 국무회의의 발언이 있고

난 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등 두 전직 대통령 구속 상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사과 등을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처럼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돼 온 것”이라며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제1야당이 과거 총선 공약으로 공수처를 약속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지금 시점에서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며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

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공수처법 개정안 일방 처리를 두고 부정적 여론이 일자 야당의 논리를 반박함으로써 직접 여론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절반은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잘못됐다”고 응답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며,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검찰 조직을 향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수보회의에서 공직자 자세를 강조하며 검찰 조직을 향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당부 메시지를 냈다면, 이날의 메시지는 수위가 높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법무부 감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에 나온 문 대통령의 이러한 메시지는 윤 총장에게 불신임의 뜻을 예뉘러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 완수 임무를 부여했지만 여전히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는 대목에서 이 같은 의중이 담겨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윤 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검찰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신임 총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

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김종인 “이명박·박근혜 구속 당 무거운 잘못…사죄”

“두 전직 대통령 과오에 정경유착 그림자가 짙게 깔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보수정당 계열 당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두 전직 대통령 영어의 뉘이 되어있다”며 “국가적으로도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모든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도 오늘 이 기회를 빌어 반성하고 사죄하며 우리 정치의 근본적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제에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상태에 있다”며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하다.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그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는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역사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과거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며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계조와 인적쇄신을 통해 거듭나겠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고개 숙인다”고 울먹이며 머리를 숙였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與, ‘임대료 멈춤법’ 공론화 시동…“해법 마련할 것”

입법 논의 본격화 예고…“다양한 의견 수렴, 정부와 협의”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의 공론화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김태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집합금지 등 제한 조치로 인해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은 다소 크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임대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을 못한 경우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의 입법 논의를 본격화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을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며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 대한 희생은 강요할 것이 아니다”라

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이동주 의원이 코로나19로 집합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절반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만큼 임대료 멈춤법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자인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임대료 감액을 착한 임대인들이 해 줄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임대료 멈춤법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直通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